

25.05.27.(화)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복지중사자 정책제안식 및 간담회 진행

5/26(월) 16: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식 및 간담회

사회복지 현장 공공성 회복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5월 26일(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 간담회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사회복지중사자들이 함께 정책제안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김희라 지부장),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장종수 사무처장),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류덕경 조직국장)이 참여했다. 선대본에서는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과 김윤 정책본부 부분부장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와 제도 개선요구를 청취했다.

양대 노총이 한목소리로 사회복지 개혁을 요구했다. 그간 정책 노선이나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회복지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공통 과제로 인식하고,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사회복지 노동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대 분야, 8대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 민간위탁 중심의 구조는 공공 책임의 실질적 이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화 ▲개인 위탁 제한 ▲가족경영 방지 ▲이사회 공공성 강화 ▲후원금 투명성 확

보 등의 구체적 개선책이 제안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권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노동 전문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조 개편이 제기되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공무원 보수체계와의 연동, 전국 단위 임금 기준 마련,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방과후 아동돌봄노동자들의 임금 불균형과 고용불안정 실태가 공유되면서, 통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셋째, 권익보호와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도 요구됐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이용자 폭력, 정신적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권익지원센터 기능 강화 ▲시·도 단위 권익지원센터 설치 ▲위탁기관 선정기준 강화 등이 제안됐다.

민병덕 위원장은 “제도가 좋아져도, 그 돌봄을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이 지쳐 있다면, 그 돌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지금의 사회복지 현장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구조,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 가족경영, 갑질, 괴롭힘 같은 악습이 구조화된 채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일을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부분부장도 사회복지사의 정책제안에 공감하며 “복지기관의 사용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며 “같은 노동을 하는데 다른 임금과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새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는 곧 시민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일터가 안정적일 때 비로소 국가의 복지가 완성된다”며 “이번 간담회가 사회복지종사자 권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